

강원

파란만장 강릉, 닭은 꿀 후보의 재대결

김동영 |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의 강릉펜션 불법선거 운동,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시정(시사IN 보도 : “강릉은 ‘무법천지’ 썩은 내 진동해도 검찰은 솜방망이”, “공무원 때리고도 세력가가 멀쩡한 이유”), 역대 네 번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14대, 15대, 16대, 18대) 기록 등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강릉 정·관계의 비리와 불법의 역사는 보수성향의 강릉 시민들에게도 변화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2012년 4월, 강릉의 변화가 시작될까?

이러한 변화의 기대감은 어느 당의 누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을 것인가에 서부터 주민들의 시선을 모았다.

2009년 보궐선거에서 대결한 바 있는 법조인 출신의 송영철, 권성동 후보가 다시 공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후보가 나타날 것인가?

결과는 이번에도 역시 두 후보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공천장을 각각 손에 넣었다.

강릉 출생, 같은 고등학교 1년 선후배, 서울로 유학, 사법고시 합격, 판·검사 임용, 변호사 개업, 그리고 출마, 이상은 강릉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쟁자로 만난 민주통합당 송영철 후보와 새누리당 권성동 후보의 약력이다. 두 정당은 이처럼 닳은 꼴의 후보를 공천하였고, 주민들은 비슷한 후보를 놓고 갈등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선거초반 지역 언론과 주민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에 더해 과거 무소속 후보였으나, 이번엔 민주통합당의 공천장을 손에 넣은 송영철 후보가 아권 단일화 할 경우, 지지율이 상승하여 새누리당 권성동 후보와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예상 밖의 21.6% 격차, 새누리당 권성동 후보가 낙승하였다.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을까? 중앙과 지역의 평가를 기초로 해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 반전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공천실패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보수적 정서가 강한 지역인데, 특히 영동지역은 더 보수적인 투표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 4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의 부패와 실정에 실망했고, 이를 반영하듯 최근 두 번의 도지사 선거에서 이광재, 최문순 후보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보다 더 나은 쇄신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전국적인 공천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민주통합당의 구태 의연한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샀고, 이러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는 그대로 표심에 반영되어 강원도의 전체 9개 선거구가 새누리당의 붉은 색으로 물들었다.

[표 1] 최근 4년 강릉지역 주요 선거 결과

	2009.10.28 (국회의원 재보궐)			2010.6.2 (지방선거)		2011.4.27 (도지사 보궐선거)	
강릉지역 투표결과	한나라당	권성동 (50.9%)	강원 도지사	한나라당	이계진 (47.7%)	한나라당	엄기영 (50.6%)
	무소속 (민주당과 단일화)	송영철 (33.75%)		민주당	이광재 (52.3%)	민주당	최문순 (45.8%)
	무소속	심기섭 (11.52%)	강릉 시장	한나라당	최명희 (79.57%)		
	창조한국당	홍재경 (3.81%)		친박연합	박종덕 (20.42%)		

2. 선거전략의 실패

민주통합당이 강릉에서 공천한 송영철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와 너무나도 닮은 꼴이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러한 후보간 유사성이 이번 선거 결과에서 독(毒)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송영철 후보는 지난해 4.27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 민주당에 입당하여, 당원으로서의 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하다. 무소속 시절, 지역에서 중도나 보수에 가깝다고 평가받던 송영철 후보가 이명박 보수정권의 심판을 주장하는 민주통합당을 같은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다.(한겨레가 조사한 후보자 정책성향조사에서도 민주통합당의 50명 후보자 가운데 가장 중도적 입장을 취한 후보로 나타남. 한겨레 2012년 4월 4일자)

이로 인해 민주통합당이 선거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권심판’,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등의 진보적 가치들의 송영철 후보의 입을 통해 전달될 때, 주민들의 귀에는 생경한 느낌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고, 결정적으로 표심을 움직일 만한 선거

운동 전략은 아니었다.

여당후보와 비슷한 약력과 성향을 가진 야당후보의 특성을 감안하면, 중앙정치에서 활용하는 정권심판의 메시지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여당후보에 비해 능력과 자질면에서 더 뛰어난 면면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선거운동 전략이 필요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3. 미흡한 공약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가 준비한 선거공약과 이를 발표하는 TV토론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후보측에서 준비한 공약은 너무나 허점이 많았고, TV토론을 통해 보여지는 능력과 자질도 여당후보에 비해 열세였다.

부실한 공약은 그대로 상대후보에게 공격의 빌미가 되었고, 구체성, 정합성, 실현가능성 등 후보 공약의 문제점이 전파를 타고 그대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

[표 2] 송영철 후보의 주요공약과 문제점

주요공약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소제공을 통한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매년 15억원 이상의 교부금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간간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숙소지원이 적절한가 • 특별교부금인지, 일반교부금인지 불명확 • 숙소제공과 교부금 확보가 국회의원의 업무인지, 시장업무인지, 교육감업무인지 미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130만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의 월급 중 일부(3-5%)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재래시장 상품권 공급을 활성화하는 국회 촉구 결의안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상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음. 개정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 • 촉구 결의안이 가지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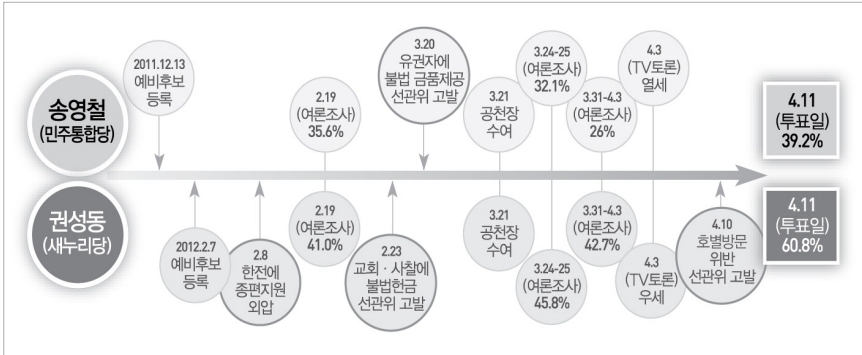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1층에 보육·교육시설 설치를 의무화(TV토론 중 기준을 300세대 이상으로 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보육시설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북부선을 따라 러시아산 천연가스과 원유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PNG)을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을 경유해야 하는 문제로 인한 고위험 사업 • 파이프라인 건설에 수십조원이 소요될 수 있는 고비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북부선(강릉-고성),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북부선을 건설하여 한반도 종단철도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공약 • 북한지역에서 중단, 사업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경로당 점심식사를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쌀창고저장비용 3,000억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해 비축하는 비용으로 3,000억 예산을 전용 • 소요시 비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유치원, 보육원 교사를 단계적으로 국가 공무원화(TV토론 중 20만명을 대상으로 연 1조원정도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100만명 가량의 공무원의 20%에 해당하는 인력을 새로 공무원으로 수용? • 예산추계 내역이 1인 500만원, 지원금인지, 급여총액인지 불명확

주요 공약들이 상대후보에게 공격당했으나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그대로 전파되어 인물론에서도 밀리면서, 주민들의 실망과 함께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4. 불법 선거운동 논란으로 인한 진퇴양난

공천장 수여 하루 전인 3월 20일 송영철 후보의 사무장을 지낸 자원봉사자가 지역 주민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조치 되었다.

[그림 1] 강릉선거구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여기에 과거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함께 불거지면서 후보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통합당은 후보 공천을 강행하였고, 불법 선거운동과 도덕성에 관련된 논란은 선거기간 내내 당과 후보, 야권연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실제로 불법 선거운동 의혹 이후부터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후보는 더 많은 불법 선거운동과 도덕성 논란이 일어졌지만, 민주당통합당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논란 이후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불법 선거운동 논란은 선거운동의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이 상당히 위축되었고, 돌아오는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하였다. 야권연대의 주체인 통합진보당 역시, “도덕적으로 의심받는 후보와 연대하여 선거운동을 함께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선거연대가 난관에 봉착하였다.”고 입장을 밝히며 부담스러워 모습을 보였다.

5. 21.6%차의 패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원도의 정서, 특히 대관령 동쪽에 있는 영동지역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 이런 보수적 정치 환경에서 야당과 그들이 공천하는 후보는 더 도덕적이고, 더 유능한 일꾼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선거에서 겨우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통합당과 후보는 여당 후보에 비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결과는 준엄했다.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새누리당 부패 정권에 대한 분노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반사이익으로만 야당의 후보를 뽑아줄 것이란 의미는 분명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의 이번 공천은 그런 잘못된 기대를 반영했고, 그 결과 강원도 전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강릉에서는 불법선거 혐의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새누리당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일각에서는 강릉이 국회의원 보궐선거만 5번 치르는 부끄러운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들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에도 당선자의 불법성이 인정되어 보궐선거를 치러야한다면, 이런 부패세력의 대안이 되지 못한 야권에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 일 것이다.

몇 달 남지 않은 너무나도 중요한 대선이 있고, 앞으로도 선거는 계속 치러야 한다. 집권여당의 부패와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아닌, 진정성과 유능함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절실함이 필요하다. ∞